



인도, 혼전 에이즈검사 필수제 '첫 탄생'

세계 3위 에이즈 감염자 보유국 인도에서 결혼 전 에이즈 검사를 의무화하는 첫 지역이 탄생했다. 여전히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도 마하라슈트라주(州)에서 결혼전 에이즈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현지 시각) 인도 일간지 더 힌두, 영국 BBC방송 등 국내외 언론들이 보도했다.

지난 31일 마하라슈트라주 전문가위원회가 이 법안을 승인하면서 마하라슈트라는 인도에서 처음 혼전 에이즈 검사 의무화 된 지역이 됐다. 다만 법안 제정에 있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충분한 의견 검토 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 지지자들은 결혼을 통한 에이즈 감염자가 크게 늘고 있는 인도에서 결혼 상대자에게 신뢰를 심어준다든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양한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에이즈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샤야 나이르 변호사는 "에이즈 감염자가 엄청 많은 인도에서 혼전 에이즈 검사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찮다. 시다르트 나레인 인권변호사는 "결혼을 위해 에이즈 검사를 강요받는다는 것은 엄연한 인권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006년 인도의 일부 주 정부는 혼전 에이즈 검사 의무화 법안을 추진했었으나 논란 속에 철회된 바 있다.

(아시아경제 : 2008.02.01)

'약가협상 시스템' 이 암-에이즈 환자 죽음 내몰아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말기 유방암치료제 '타이커브',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 등 중요 치료제들이 줄줄이 약가를 받지 못해 환자의 의약품 수급에 문제 발생하고 있다. 이들 중요 치료제들이 하나 같이 약가를 받지 못한 주요 이유는 회사에서 제기한 약가와 정부에서 제시한 약가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평원이나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기존 치료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에 부담을 최대한 줄여 최저가에서 결정을 보겠다는 것이다.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의 유방암치료제 타이커브의 경우 공단과의 약가 협상도 못해 보고 심평원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비급여 판정 이유인 즉슨 향후 같은 종류의 항암제가 출시되니 그때 가서 다시 경제성 평가를 해 급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항암제를 학습고대하고 있는 말기 유방암 환자 200여명과 그 가족들은 이런 심평원 처분이 청천벽력과도 같을 것이다. 타이커브의 출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들 말기 유방암 환자들의 생명 또한 그만큼 단축되기 때문이다.

백혈병으로 글리벡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 중 글리벡 내성 환자들에게 한곡BMS의 스프라이셀 출시를 학습고대했을 것이다. 이마저도 심평원이 급여 결정을 했지만 건보공단과 회사측의 약가협상이 결렬돼 언제 출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러한 약가협상 결렬로 복지부의 직권중재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 결정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정작 답답한 입상이 되어버린 것은 백혈병 환자와 그 가족들뿐이다.

너무 충격스러운 일은 한국로슈의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이 현재 약가결정 시스템 이전에 가격 결정 받았지만 본사 가격 정책에 맞지 않아 수입을 포기했으나, 에이즈 환자와 질병관리본부의 청원으로 심평원이 재 경제성평가 후 약가협상 부분을 건보공단에 넘겼으나 양측의 가격 입장 차이로 약가협상이 결렬됐다. 이 여파로 기존 에이즈 치료제 사용으로 내성이 생긴 환자들은 이 새로운 신약을 써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들 치료제의 경우, 그 비용이 건보제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수 중증 환자들의 생명은 생각하지 않고 약가협상을 일반적으로 틀어버리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약가를 받게 된다는 예측 가능성이 없게 되면 다국적제약사들은 희귀질환·에이즈·항암제 등의 신약을

치료받는 에이즈환자와는 성관계 가져도 된다

항 에이즈바이러스 약물 치료를 받는 에이즈 환자는 그냥 성관계를 가져도 상대방에게 에이즈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는다고 스위스 국립에이즈위원회가 31일 밝혔다. 이 위원회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항 에이즈 바이러스 약물 치료를 받아 최소 6개월간 혈액내 에이즈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한, 에이즈 환자는 성관계시 감염을 우려해 콘돔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제네바대학병원의 에이즈 전문가인 베르나르트 히르셀 박사는 "이 같은 결과는 서로 다른 4가지 연구들을 통해 나왔다"면서 아이를 갖고자 하는 에이즈 환자 커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연구는 1990~2003년 기간에 스페인의 393 이성 커플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에이즈 환자가 항 에이즈 바이러스 약물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건강한 상대방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례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스위스 국제방송이 스위스 불리턴 오프 매디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브라질에서 이뤄진 또 다른 연구는 43명의 에이즈 환자를 포함한 93 커플을 대상으로 이뤄져 6명이 감염됐으나, 그 원인은 에이즈 환자가 치료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데 있었다는 것이다. 또 우간다에서 행한 연구와 임신 여성들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히르셀 박사는 덧붙였다. 스위스의사연합의 르네 라켈바스는 그 같은 연구 결과를 환영하면서 "그러나 각각의 경우마다 환자의 담당 의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 2008.01.31〉

국내에 도입하는 일이 힘들어지게 돼 결국 소수의 중증 환자들만 골탕을 먹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치료제와 같은 제품의 급여 현상을 기다리고 있는 나노즈제약사 관계자는 "이윤이 많이 남아 가서 우 약이 아닌데 약가협상이 자칫 잘못되거나 하면 약 출시를 기나리던 환자들의 비난과 그로 인한 기업 이미지만 흐려지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재봉을 도입이 꺼려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와 약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전체적인 시선이 제약회사가 무리할 약가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된 것처럼 일러지고 있다며 이는 현 약가결정 시스템을 고묘히 이용한 정부의 여론 플레이로 모든 죄를 제약사에 뒤어씌우고 있지만 을의 입자에선 제약회사로써는 이후 미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오해를 뒤집어쓰고 있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불만을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약가를 협상하는 주체를 본인이

나 가족이 그러한 병에 걸려야 그 현실함을 알지,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귀귀질한 말기 유방암·에이즈 등의 환자들 절박한 심정을 심문의 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포뉴스 : 2008.02.04〉

태아 AIDS 예방치료제, 수유중 아이에도 50% 예방

태어날 때 아이들이 에이즈(AIDS)에 감염되는 것을 막는 약물이 수유중에도 아이들의 AIDS 감염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5일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이 보스턴에서 열린 AIDS 전문기 회의에서 발표한 연구결과 모유수유중 아이들에게 AIDS 치료제 네비라핀(nevirapine)을 복용시키는 것이 AIDS 감염 여성이 이 같은 바이러스를 신생아에게 전할 위험을 50% 이상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IDS NEWS

네비라핀은 현재 태어난 아이들을 AIDS로 부터 보호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진통이 시작된 엄마와 태어난 아이에게 네비라핀을 한 번 복용케 하는 것이 AIDS 감염 위험을 약 47% 가량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출생후에도 엄마의 모유를 통해 계속 AIDS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된다. 2001~2007년 사이 이니오피아아 인도, 우간다 지역에서 진행된 2000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결과 생후 6주 가량 네비라핀을 투여하는 것이 아이들이 출생 당시 한 번 네비라핀을 투여하는 것에 비해 아이들이 AIDS에 감염될 위험에 비해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비라핀은 현재 베링거 인겔하임사에 의해 비이라문(Viramune)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 2008.02.05〉

안전한 성생활이 입을 예방한다는 사실

국민 4명 중 1명만 알아

- '국민 암예방 수칙' 인지 및 실천도 조사 결과 발표 -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립암센터에서는 '제1회 암예방의 날'을 맞아 2006년 10월 제정된 '국민 암예방 수칙'(10개 항목)에 대한 인식도 및 10개 수칙 항목에 대한 실천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대상자 중 암이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약 84%, '국민 암예방 수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경우는 약 46% 수준이었다. 각각의 수칙을 실천하면 암이 예방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는 질문에 대하여, 10개 항목 내부부의 경우 70% 이상이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안전한 성생활'이 암예방(자궁경부암, 간암, 카포시육종 등)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약 26% 수준에 불과하였다.

10가지 수칙 중 가장 지키기 쉽다고 생각하는 수칙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균형잡힌 식사하기'였으며, 가장 지키기 어려울 수칙은 '수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걷거나 운동하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암예방 수칙에 대한 실천도를 조사한 결과 수칙 중 6가지 이상을 실천하고 있는 대상자의 비율은 약 55% 수준이었고, 10개 모두를 실천하고 있는 대상자 비율은 약 3% 수준에 불과하였다. 암에 대한 기여 위험도로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금연, 건강한 식생활, 감염 예방, 조기검진 관련 항목을 모두 실천하고 있는 비율은 7.6%에 불과하였다.

국립암센터 암예방과 임민경 박사는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 암예방 수칙'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실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암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수칙별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국민 암예방 수칙' 실천지침 공표와 배포를 통하여 구체적인 수칙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반복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수칙과 실천지침 세공 효과들 보다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측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홍보담당관실 : 2008.03.19〉

대구소년원 AIDS 강제 검사, 인권 침해 논란

대구소년원(읍내정보통신학교)을 비롯해 전국 9개 소년원들이 입소하는 미성년자들에게 10여년간 강제로 에이즈 검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소년원 측은 1997년 이후 지금까지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위탁생(소년 미결수)을 포함한 모든 보호 청소년들의 혈액을 채취, 일률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해왔다.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 정기 또는 수시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제 검진이 아닌 의명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소년원 측은 "입소 청소년들의 신체검사 과정에서 혈액을 채취해 보건소에 검사를 의뢰한다"며 "에이즈는 특성상 잠복기인이 있어 입소 후 3개월 뒤 다시 해 모두 2차례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3주 정도 머무르는 위탁생의 경우 입

소와 농시에 에이즈 검사를 받는다.

현재 만 12~20세 사이 위탁생 11명과 보호수년 98명이 입소해 있는 대구소년원은 보건소에 지난 한 해 610건의 에이즈 검사를 의뢰했다. 소년원생들은 모두 상병검사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에이즈 검사 항목이 포함돼 있다.

더욱이 심인 재소자를 수용하는 일반 교정시설은 에이즈 검사에 관해 자기 선택권을 주고 있지만 미성년자에 대해 강제 검사를 하는 것은 인권 침해 우려가 많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선원법'에 따라 위향선원들을 대상으로 에이즈 강제검진을 규정하고 있다. 이마저도 에이즈 양성 반응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율성을 해치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세소돼 있다.

대구소년원 관계자는 "에이즈가 수로 심 전축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성병검사를 하면서 함께 에이즈 검사를 병행한다"며 "대구에선 아직 없지만 '이년전 다른 지역에서 감염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시영(사)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사회사업과장은 "소년원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산재적인 에이즈 환자로 단정지어 일률적인 검사를 해서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해익 변호사(법무법인 삼일도)도 "신염병을 막기 위한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강제검사 시스템에서는 설명 합법이라 하더라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매일신문사 : 2008.03.24)

유엔, 아시아에 에이즈 창궐 경고

-2020년 이후 매년 50만 명씩 에이즈로 사망

유엔이 2020년 아시아 지역에서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50만명씩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농사에 아시아 국가 정부들에 에이즈 퇴치 기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26일(현지시간) 촉구했다.

유엔 산하 에이즈 전담기구(UNAIDS)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 지역에는 약 500만명의 HIV

감염자가 있으며 매년 이 가운데 44만명이 에이즈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보고서는 강력한 퇴치 방안 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HIV 감염자 수가 2020년 10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감염자 수가 일부 국가에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5세에서 44세까지의 사망 원인 중 에이즈는 여전히 큰 폭을 차지하고 있다"고 명시해 있다.

또 아시아 지역은 2250만명의 HIV 감염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HIV 감염국이라 불명예를 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HIV 감염은 주로 성매개, 동성과의 성관계, 주사를 사용하는 마약 중독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NAIDS는 국제 사회의 에이즈에 대한 관심이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돼 있으나 아시아 지역에도 에이즈의 심각성을 알깨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 에이즈 위원회의 치크라비르시 칸가라잔 위원장은 "아시아 지역 특히 이슬람교를 위한 강력한 HIV 통제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에이즈 위원회는 HIV 퇴치 방안으로 성지인들의 적극적 참여, 자금을 비롯한 풍부한 지원 등 다양한 세부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난 총상에 전달했다. 보고서는 특히 권고 사항이 즉각 실행된다면 HIV 감염자 증가 수는 300만명선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 지역의 에이즈 퇴치 기금은 12억달러로 효과적이지 못한 문화를 진행하기 위해선 64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기문 유엔 총장은 이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발전시키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은 HIV 감염과 죽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금을 모아야 한다"며 "수백만명을 기난으로부터 구해 에이즈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심명시를 통해 의견을 밝혔다.

(로이터 : 2008.03.27)